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9
----------	-----

2019. 7. 19.(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7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7월 11일

-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차량 및 단속(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제한지역 : 충청북도 전 지역
 - 제한대상 :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 단속방법 :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구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미세먼지 관련 정책 심의 기구 설치 근거 마련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충청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조직되어 운영하던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명문화 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조는 미세먼지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음.

-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단속에 관한 사항 등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권한을 규정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19. 5. 24. ~ `19. 6. 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사용된 ‘도민’, ‘도의원’은 잘못된 약칭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10조 중 ‘해촉’은 ‘위촉 해제’ 용어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과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명에 비하여 조문에 담긴 내용이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명 또는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2조 운행 제한 대상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자동차 운행 제한이 상시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구를 추가해야 함.
- 안 제6조는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협의회는 협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회를 위원회로 또는 심의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8조 협의회 간사를 2명으로 두고 있는데 시행 중인 타시도 관련 조례에서는 모두 간사를 미세먼지 담당업무 과장 또는 팀장(사무관)으로 두고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담당자를 간사로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는 심의기능이 없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임.
- 안 부칙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에 대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행일을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종전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의회 재구성 및 위원의 재위촉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의 협의회가 법정 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7. 11. 이수완 위원

○ 수정이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약칭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수정함
- 안 제8조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간사를 1명으로 수정함
- 안 부칙은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도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단속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 부트로 규정함

8. 소 수 의 견 요 지

○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주민설명회와 홍보를 통한 도민불편과 민원발생의 최소화가 의결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하고 위와 관련된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함(이수완 위원)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를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에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운행 제한”이라 한다) 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동차 운행”을 “운행”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동차 운행”을 “운행”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단속공무원”을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식별할”을 “알아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자문하기”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도의원”을 “충청북도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민”을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되며, 안전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장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세먼

지 담당 국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협의회 심의 및”을 “협의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을 “위원의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회의의 위원은 제6조 이하에 따른 협의회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u>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u>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여</u> ----- -----.</p>
<p>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자동차 운행 제한”이라 한다)대상지역은 <u>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u></p>	<p>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u>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에</u>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u>운행 제한</u>”이라 한다) 대상지역은 <u>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u></p>
<p>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u>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u>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u>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u>」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u>운행</u>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1. ~ 4. (생략)

제7조(협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3. (생략)

4. 기타 공공단체 대표자 및 도민

④·⑤ (생략)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면지 업무 담당 과장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세면지 담당 국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생략)

⑥ 협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협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충청북도의원

2.·3. (현행과 같음)

4. ----- 충청북도민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
-----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과장-----

⑤ (현행과 같음)

⑥ 협회의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 제>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
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
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 5. (생략)

제11조 (생략)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위촉을 해제-----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에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운행 제한”이라 한다) 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5조(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 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단속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청북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진 사업
3.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정무부지사,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 청주시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충청북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 임직원
4. 기타 공공단체 대표자 및 충청북도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정무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검사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자료제출·검사 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회의 위원은 제6조 이하에 따른 협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관련법령 발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자료제출·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 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km)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leq n \leq 12$)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

"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도민 건강 보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영을 제한하고,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관련 정책, 사업 등의 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발생
-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으로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5조(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안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단속시스템 구축 및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

- 단속시스템 1식, 단속카메라 60대
- 협의회 위원 20명(지급대상 16명), 연 4회 개최

나. 추계 결과 : '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012백만원(국비 1,400
도비 732, 시·군비 880) 정도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단속시스템 구축(4억원/식) : 국비 50%, 도비 50%
 - 단속시스템 유지·관리(6천만원/년) : 도비 100%
 - 단속카메라 구축(4천만원/대) : 국비 50%, 도비 10~15%,
시·군비 35~40%
- ※ 지방비 중 도비 자원비율 : 청주 20%, 기타 30%
- 협의회 위원 수당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박대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206,400	406,400	466,400	466,400	466,400	3,012,000
단속시스템 구축	400,000					400,000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60,000	60,000	60,000	180,000
단속카메라 구축	8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협의회 위원 수당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재원 조달	1,206,400	406,400	466,400	466,400	466,400	3,01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6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286,400	66,400	126,400	126,400	126,4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32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8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단속카메라 구축 : 1차년도 20대, 2차년도~5차년도 각 10대 ⇒ 총 60대

※ 협의회 위원 수당 : 16명 × 100천원 × 4회(연)